

도의회 상임위 의정 증계서

“집행 불가능 예산 삭감을”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새민금 사업 예산 최대한 확보·신속 집행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의원)는 7일부터 9일까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2회 추경규모는 전북도의 경우 기경예산 953,434억원보다 5,643억원(0.6%) 증액된 959,077억원, 도교육청은 기경예산 335,879억원보다 3,568억원(9.9%) 증액된 339,437억원으로 예결위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첫날 예산안 심사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북 현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수 위원장(익산)은 금년 7월 말까지 불용액 현황을 묻고 국의 여부 등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삭감 조치해 가용재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교부세 패달리 최소화 와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덜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불용액과 이월액 추계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정호윤 의원(전주)은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세계잡역리 지원 보조금 10억원이 미집행된 것과 SK새민금데이터 구축이 지연될 상황을 점검하면서, 새민금 사업 가속화와 관련 사업 인프라 구축 예산

을 최대한 확보할 것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은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과 관련해 전북도의 인일한 대응을 질책하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전북의 대안을 묻고,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 수소그린에너지 등 미래먹거리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모델 조성에 힘써 도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고 관련 사업 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하 의원(군산)은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는 충북도가 1,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조성할 예정으로, 전북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문화 상황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향후 계획을 묻고, 해양수산부가 직접 전북도에 투자할 수 있는 시설 유치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산업체 지원기관 전주 집중 잘못됐다”

행자위, 올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제3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 2021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은 “주요 산업체가 군산과 익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원기관들이 전주에 집중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 산업위기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제2의 산업위기 우려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북연구원과 테크노파크가 협업해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재 부위원장(전주)은 전북연

구원의 지역정책모니터링단(200여명)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인재영입 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 모집과 선발, 심사위원 위촉 장학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장학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일부 기관의 경우 지적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속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째 경영평가 용역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심

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정수)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자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북연구원의 경우 동부권 지역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전북연구원이 시·군에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천마산업 특화작목 육성 과제 후속조치 논의

황의탁 도의원, 천마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의원이 7일(사)무주천마사업단 세미나실에서 농가, 가공공장, 담당 공무원 등 천마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개회에서 황의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천마산업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성공적 육성을 위한 과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약용자원연구소 안민실 소장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철 과장 (사)무주천마사업단 여환호 단장, 황정규 무주천마작목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안민실 약용자원연구소장은 관련 연구 추진상황으로 비가림 재배, 연작장애경감, 배양토 개발 등의 중점 과제와 노지 대비 수량 증수, 부패율 감소 등의 세부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현재 시급한 과제인 ▲유성자마 생산시설 확충, ▲우량자마 생산기술 도입, ▲가공제품 유통망 개선 등과 충분히 연계돼야 하고, 도



내 관계 기관인 도 농축산식품국,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약용작용연구소 등이 연대·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이 강조한 천마를 활용한 요식업 활성화에 대해 토론을 펼쳐 도내 식품 가공 업체와 연계한 시범 메뉴 개발 등을 해법으로 논의했다.

황의탁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천마산업의 어려운 여건 뿐만 아니라 산업을 전반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근 천마가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된만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야권 주장 정권교체 앵무새 같은 소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전북,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 지정할 것”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교체에 대해 “앵무새 같은 소리다.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 중 무엇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울러 심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 양당체제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전북도민들의 손을 맞잡고 미래로 건너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가축분뇨 이용 자원순환 활성화

두세훈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북도의회가 가축분뇨를 자원순환에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쟁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의원은 “가축 사육형태가 규모화되고 이로 인한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및 처리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자원순환에 활용요령 방지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두 의원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육류소비 증가하고,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사육두수는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과 악취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실적 평가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제의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두세훈 의원은 “육류소비 및 가축사육 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진보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복지전북포럼 관계자들이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도자의 제일 큰 덕목, 품격”

민주 권리당원·대선 경선 선거인단 등록 전북도민 5만 회원 신복지전북포럼,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북지역 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지지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된 5만여 명을 회원으로 뒀다고 밝힌 신복지전북포럼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비록 충청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1만여 표 차이로 졌지만 7만 권리당원의 전북과 27만 권리당원의 호남에서 반드시 완승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하고 정직한, 야당 후보와 견주어도 부끄럼이 없는 대선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문재인 정부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훌륭한 복지국가 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선진국 지도자로서 지녀야 하는 품격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은 정직과 신뢰, 품격”이라며 “이제 또다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복지전북포럼은 “여타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많은 준비된 공약과 깨끗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실천력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민주 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최후의 보루로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기호 4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당당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기본국가전북연대 관계자들이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정 성장과 지역 기본권을 위한 전주시민 7,059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굴의 용기·결단력 갖춰”

기본국가전북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공정성장과 지역기본권’을 위한 전북 전주시민 7,059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를 원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호남 안에서 전북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는 말이 있다”며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지사에 이르

기까지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했으며 역경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민 7059명은 이재명 후보는 노동연변연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정력한 행정가,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 등을 갖춘 정치인이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국가전북연대는 이날 전주시를 시작으로 14개 시·군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